<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XX>

"부실기업 정리와 경제회생"

한보사태를 계기로 부실기업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견그룹으로 불리워졌던 삼미를 비롯 진로, 대농에 이어 한신공영이 부도를 내거나 부도방지협약의 보호 대상으로서 근근이 연명하는 신세로 전락함으로써 우리나라 재벌들의 구조적 문제점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국내 재벌들은 대부분이 60년대 이래 각종 특혜구조 속에서 존립해왔고, 현재도 특혜구조의 덕을 보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래 무자본에서 출발했으니 자본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벌로 성장한 이후에도 건전한 자본 육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기 보다는 금융채권을 무작위로 끌어다 사업을 확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 수익성있는 사업을 벌이거나 사업을 건실화시키기 보다는 정치권력에 대한 줄대기를 계속해「이권」을 거머쥐느냐 아니냐에 따라 사업성패를 결정하는 우를 자초(?)한 면이 없지않고, 부실채권을 무기로 사업을 확장하고 또다시 부실채권의 덩치를 키움으로써 위세를 부리는 웃지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투자할 자기자본이나 여건은 내팽개친 채 금융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벌이고, 부채가 많을수록 안전성을 보장받는 부실의 덩어리를 키운 것이다. 이러한 부실재벌이 국제화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사회적으로도 시급히 척결해야 할 암적 존재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정부가 99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초과차입금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8년부터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며, 97년 하반기 중으로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는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당연한 조치라고 보아진다.

정부는 우선 재벌들의 과다한 차입경영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연내에 법인세법을 개정,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초과차입금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상법인은 30대그룹 소속기업 또는 상장 및 장외등록법인에 우선 적용하되 1~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99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차입금 과다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차입금 배수가 자기자본의 5~6배에 달하는 기업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한다.

특히, 계열기업간 채무보증도 규제대상 차입금에 포함시키고 계열사가 부도를 내 대신 물어준 대손금도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계열기업간 대출 및 회사채 지급보증액 등 채무보증액도 차입금에 포함시켜 채무보증으로 인해 구상채권이 발생했을 때에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보증을 받은 계열사가 부도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못해 대위변제한 대손금도 손비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벌집단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외부 회계감사인의 증관위 지정제도, 감사의 상근화 및 감사지위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주주 제안제도 활성화, 소수주주의 대표소송권 강화, 특수관계인과의 자금·자산 거래내용에 대한 공시제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며, 금융기관 신용정보 공유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실기업이 자구노력 차원에서 부동산이나 사업의 일부를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 등 관련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부실기업이 부동산을 정리전담기구 등을 통해 매각할 때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낡은 공장을 처분하고 새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매각대금 전액을 공장 건설자금으로 투자할 때도 특별부가세를 물리지 않거나 일부를 삭감해줄 계획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부실기업 해소 및 방지대책이 원안대로 시행되고, 그래서 재벌기업의 경영이 투명화될 수 있다면 아마도 한국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것은 분명하고, 또 사회정의 차원의 결실이 기대되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부실재벌 정리조치가 정치현상 타개를 위한 산물로 전락, 재벌압력을 이겨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화학저널 1997/6/9>